

북한의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의미와 전망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6월 2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오는 9월 상순경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당대표자회는 1958년과 1966년에 이어 3번째이다. 북한은 당대표자회 소집을 밝히면서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이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여 이 회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이 기구는 1958년 3월과 1966년 10월 등 두 차례 걸쳐 열린바 있다.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여 열린 1958년의 대회는 1956년 8월의 숙청사건을 매듭짓고 1차 5개년 계획을 토의·결정하였다. 두 번째로 열린 대표자회는 당 중앙위원의 교체와 당 총비서제의 도입이 있었다.

당대표자회의 기능으로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 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 및 준 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당대표자회의 이같은 기능은 당대회의 기능과 비교할 때 차별성을 갖는다. 당대회는 최고지도기관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요 안건들이 처리되지만, 급격한 상황변화 또는 당내 당면 인사문제 등은 대표자회에서 처리됨을 알 수 있다. 4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대표자회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노동당을 강화하여 당의 정책 기능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당대회를 열지 못했다. 199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이후에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열지 못했다. 그에 따라 그동안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에 대한 개편 및 보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당대표자회는 1966년의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처럼 당 중앙위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임한 직후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당중앙위원회 산하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당검열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당의 기능을 정상화해 '당적 지배'를 확고히 하고 당과 인민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6월 30일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이번 당대표자회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운영과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셋째는 당적으로 후계체제 수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6월 30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선군혁명의 생명선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라면서 "이번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고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에서는 보다 큰 비약

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족만대’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번 당대표자회는 표면적으로는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표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수립을 위한 당 기능의 정상화와 인사 개편에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은 어떤 인사개편과 정치일정을 채택할 것인가? 첫째, 최고지도 기관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 중앙위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한 후 당 중앙위 제6기 2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당최고지도 기관에 대한 선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상무위원 중 김정일 위원장 혼자 남은 상황이고, 정치국 정위원도 김영남, 김영주, 전병호 등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최영림, 김영춘 등의 발탁이 예상되고, 정치국 위원에는 상무위원 외에 오극렬,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이용무), 양형섭, 홍석형, 김경희, 이길송, 김병률, 주상성 등 국방위원들의 등용이 예상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는 내각 부총리급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논점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김정일 후계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됐다는 점에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비서국에는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등 4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제6차 당대회의 경우를 참고로 할 때 10여명 선에서 비서진이 보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건(대남, 국제담당), 홍석형(경제 담당), 장성택(공안담당), 이광호(과학) 등이 유력하다. 문제는 후계자 김정은이 조직담당 비서직에 선출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최소한 비서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2015년경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공식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일성 생존시 ‘인민생활 향상’이 된 후에 제7차 당대회 개최를 시사하였기 때문에 북핵문제, 북미관계 문제, 남북관계문제, 북중관계 문제 등 제반 사항이 호전됨으로써 먹는 문제가 해결될 시점인 2015년경에 제7차 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금번 당대표자회가 제7차 당대회를 가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당대표자회가 제7차 당대회의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2015년 제7차 당대회 개최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김정은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조직담당비서직에 선출되고, 후계자를 중심으로 제7차 당대회를 준비해서 2015년에 당대회가 열리는 수순이다.

셋째, 당강령 및 규약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기간과 같은 해 8월 ‘방북 언론인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잇달아 당규약 개정 의사를 밝혀 ‘조선노동당 규약’(전문 및 10장 60조) 손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다. 김정일은 2000년 8월 ‘방북 언론인 사장단’과의 담화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은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당 강령은 “해방직후 40년대 것이어서 과격적 전투적 표현이 많이 있다”고 강령(전문) 개정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다만 당 강령 개정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당간부들 가운데는 주석님과 함께 일하신 분들도 많고 연로한 분도 많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면서 “바꾸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술하게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숙청한다고 그럴 것”이라고 밝혀 당 강령 손질이 쉽지 않다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김정일의 발언으로 볼 때 당규약은 1998년의 ‘김일성 헌법’ 수준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개정헌법이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 헌법’이라고 명명했듯이, 당규약 전문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명명하고 ‘김일성의 유훈관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 ‘혁명적 군인정신’, ‘사회주의 강성대국’, ‘일심단결’, ‘우리민족끼리’ 등의 표현이 첨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군 사상’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이나 이미 2009년 4월의 개정헌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노동당 지도이념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